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

성명재 (홍익대학교)

-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현금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는 공적이전 소득과 가까운 친척·친지들이 제공하는 사적이전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의 분배구조는 하향 안정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가구의 소득순위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이동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고령화가 소득이동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은퇴인구 비중이 늘어난다. 노인은퇴가구는 취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은퇴인구가 많아 질수록 소득이동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 소득이동성이 작아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득격차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내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분배구조의 경직성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총소득의 불균등도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빈곤율은 원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안정화되는 듯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분배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 다수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보고되었다(성명재, 2016; 정지운·임병인, 2020; 최제민 외, 2022).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아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소득격차는 가구 간 소득의 차이를 절대 크기로 측정할 수도 있고, 소득의 상대적 비율, 즉 소득 점유 비중의 크기 차이로 측정할 수도 있다. 앞의 것을 절대격차, 뒤의 것을 상대격차라고 한다. 소득분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의 소득 순위가 얼마나 많이 뒤바뀌는지를 측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구의 소득 순위가 바뀌는 것을 소득이동성이라고 한다. 소득이동성이 크면, 단기적으로 가구 간 소득격차가 크더라도 여러 기간 동안 소득 순위가 뒤섞이면서 장기적으로 각 가구의 소득은 점차 평균값에 가까워지고 그 결과 장기 소득불균등도는 작아진다. 반대로 소득이동성이 작으면, 장기적으로도 소득분배 격차가 작아지지 않아 단기적인 소득격차의 크기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단위의 단기 소득불균등도 뿐만 아니라 소득이동성도 함께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여 년 동안 가구 연간소득의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 그리고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정·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소득불균등도의 추이

상대소득분배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소득분포가 균등할수록 0에 가까워지고,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균등해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만약 모든 가구의 소득이 똑같아지면 지니계수는 0이 되고, 반대로 한 가구가 모든 소득을 독차지하는 극단에 이르면 지니계수가 1이 된다.

[그림 VII-24]는 2007~2021년 동안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소득불균등도 추이를 보여준다. 시장소득이란 일반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을 기업(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획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임대소득 포함) 등을 가리킨다.¹⁾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전소득은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

로 제공받은 소득을 말한다.

[그림 VII-24-1]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큰 진폭으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변화패턴을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2000년대 말 지니계수가 0.43 정도였지만 2020년대 이후 0.45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비교하면,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조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소득 지니계수는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0.42~0.43 수준을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 0.44를 조금 상회할 정도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하락한 다음 2020년 이후 0.418로 감소하여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²⁾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소득의 상대격차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반면 총소득의 상대격차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이 총소득이다. 총소득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보다 작다는 것은 이전소득이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I-24-2]에서 보듯이 지난 10여 년간 두 가지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차이는 조금씩 확

1)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것을 시장소득으로 정의한다.

2) 「재정패널조사」는 2019년부터 신규 표본으로 약 4,000가구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표본가구의 범위가 이전 기간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니계수 추정치에도 일부 오차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VII-24]에서 2019년에 시장소득과 총소득 지니계수 모두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만약 신규 표본 가구 추출에 의한 오차가 개입되었다면, 지니계수가 하락한 부분 중 일부는 표본가구 추가에 따른 오차 때문일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2019년에 실제로 소득불균등도가 크게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표본추출 오차에 의해 변화폭이 일시확대(overshooting)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본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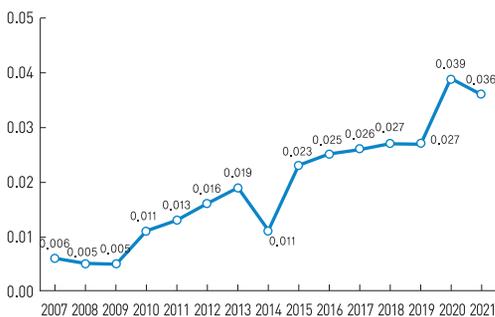
대되고 있다. 2007년에는 시장소득과 총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0.006(=0.431~0.425)였는데, 2021년에는 0.036(=0.454~0.418)으로 약 6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VI-24] 가구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2007~2021

1) 시장소득 및 총소득 지니계수



2)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주: 1)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 시장소득 지니계수 - 총소득 지니계수

3)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위의 논거를 달리 표현하면, 2007~2021년 동안 시장소득의 상대격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추이를 나타내었지만, 민간과 정부로부터 지급된 현금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시장소득 상대격차의 확대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컸기 때문에 총소득 단계의 소득분배구조가 하향 안정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은퇴인구와 노인은퇴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 노인은퇴가구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젊은 연령대보다 훨씬 어렵다. 따라서 노인은퇴가구의 경우에는 젊은 연령대보다 빈곤가구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은퇴 인구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소득 단계의 소득분배격차, 즉 소득불균등도는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10여 년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등락이 있지만 조금씩 확대 추세를 보였던 것도 인구고령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소득의 분배격차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인구를 주된 수급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과 같은 복지기능이 강화된다면 보완적으로 총소득 단계의 분배구조는 완만하게 하향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연령별 소득분배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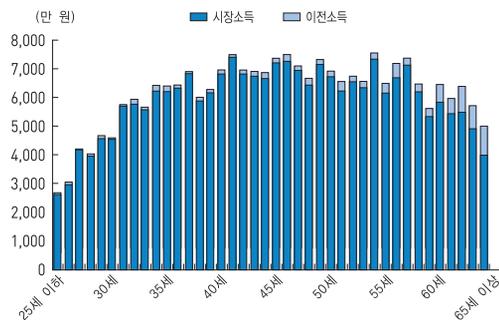
[그림 VI-25]는 2021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령별 총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 젊은 연령대와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의 소득수준이 낮고 30~50대 연령대의 소득수준이 높은 \cap -자 형태의 생애주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젊은 연령대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대이다. 경험이나 경력이 별로 없고 대부분 직급이 낮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력과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평균소득도 상승한다. 40대 중반~50대 초반 연령대에 이르면 평균소득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이후 체력적·정신적으로 노쇠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은퇴도 늘어나면서 평균소득도 감소³⁾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 VI-25]와 같이 \cap -자의 형태로 보여지는 연령대별 평균소득의 궤적은, 생애주기 가설에서 얘기하는 생애소득 패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VII-25]에서 보듯이 총소득은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젊은 연령대일수록 이전소득이 미미하고, 총소득은 대부분 시장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이전소득(비중)이 커진다. 특히 40대 후반~50대 초반 연령대부터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연령대는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은퇴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연령대이다. 또한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빈곤가구 등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조금,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 등의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고령가구, 특히 노인가구로 갈수록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한다. 은퇴 등으로 인해 시장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며, 노인 연령기에 가까워질수록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적연금의 수급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VI-25]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2021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2) 이전소득은 총소득에서 시장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그림 VI-25]에 의하면, 20~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와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의 평균소득 수준은 중·장년층(주로 30대 후반~50대 초반)보다 작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비율을

3) 성명재(2015)에 의하면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저소득층은 대부분 노인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하였을 때, 모든 연령집단에서 그 비율이 같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소득격차가 모든 연령집단에서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의 절대크기(즉, 절대소득격차)는 평균소득이 높은 연령일수록 크고, 반대로 평균소득이 낮은 연령일수록 절대소득격차가 작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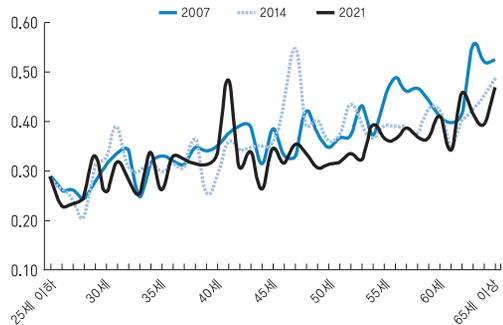
그러므로 젊은 연령대에서 출발하여 중·장년층을 지나 노년층에 이르는 동안 연령별 절대소득격차는 “증가 → 정점 → 감소”와 같은 \cap -자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26]은 2007년, 2014년, 2021년의 3개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을 25세부터 65세까지 1세 단위로 분할하고, 각 연령집단의 총소득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곡선으로 연결한 그림이다. 편의상 2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각각 25세와 65세 연령으로 편입시켰다.

[그림 VI-26]에서 보듯이 3개년도 모두에서 연령별 지니계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속 상승한다. 특히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더라도 상대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도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니계수가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VI-25]에서 논의하였듯이 중·장년기까지는 절대소득격차가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면 절대소득격차는 감소한다. 그렇지만 상대소득격차는 노년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다는 점

[그림 VI-26] 연령별 총소득 지니계수, 2007-2021



주: 1)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에서 절대격차와 상대격차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 괴리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총소득은 대부분 시장소득으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노동(또는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급여(소득)를 받는다. 자영업자들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경영을 하고,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포함)을 획득한다. 시장소득이란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얻게 되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말한다. 그런데 가구가 기업에 제공하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수준은 가구별로 균일하지 않다. 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매우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더라도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원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원하는 기업이 적다. 생산성이 뛰어난 사람은 고소



득 직종에서 더 오래 일하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저소득 직종에서 일을 하되 그나마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고소득자가 되고 또한 오랫동안 고소득 직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저소득자가 되고, 중·장년이 되더라도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이른 연령대에서 실직, 은퇴를 경험하면서 낮은 소득수준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시장선택(market selection)'이라고 한다. 시장선택 현상은 생애를 두고 계속 나타난다.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였을 때 기업들은 누가 생산성이 높고, 누가 낮은지 잘 구분하기 어렵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소득격차가 작다. 그러나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누가 생산성이 높고 낮은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장선택의 결과로써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절대소득격차가 줄어든다. 노쇠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취업인구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임금 수준도 낮다. 노인들은 절대다수가 저소득층이다. 소수의 취업하고 있는 노인과, 비취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다수의 노인들 사이에는 상대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 바로 이런 연유로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접어들더라도, 절대소득격차는 작아지지만 상대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동성 추이

소득분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니계수(즉, 소득불균등도)가 얼마이고 시간에 따라 크기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소득분배격차의 변화추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니계수 값이 똑같더라도 시간이 경과할 때 가구의 소득순위가 활발하게 뒤바뀌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불균등도의 크기와 변화 방향뿐만 아니라 소득순위의 변동 크기를 나타내는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도 함께 고찰해야 소득분배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순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배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득분배격차와 장기적인 소득분배격차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와 달리 가구의 소득순위변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장기적인 소득분배격차가 단기의 경우보다 줄어든다. 즉, 장기적으로 고소득과 저소득이 고르게 실현되면서 소득순위가 뒤섞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구 간(상대)격차가 줄



어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이 클수록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격차가 작아지고, 소득이동성이 작을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면서 장기적으로도 소득불균등도가 작아지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에 소득분위가 몇 분위에서 몇 분위로 바뀌었는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소득순위의 변동성 크기를 통계 분산값으로 형상화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은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측정하기는 쉽지만 소득이동성의 크기 변화를 한 눈에 판단하고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고 불편한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해가 쉽고 크기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VI-5〉는 첫째 방법을 이용하여 2007년과 2008년 사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소득분위별로 분위를 이동한 가구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 VI-5-1〉의 첫째 행(2007년 1분위)을 예로 들어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자. 전체 가구 중 2007년에 최하위 소득층인 1분위였고 2008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잔류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14%였다. 2007년 1분위에서 2008년 2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

〈표 VI-5〉 소득이동성: 소득분위 이동표, 2007-2008, 2020-2021

1) 2007-2008년

		2008년 (%)									
2007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계
1분위	6.14	2.01	0.78	0.41	0.21	0.05	0.16	0.08	0.10	0.06	10.00
2분위	1.75	4.12	2.37	0.72	0.57	0.34	0.10	0.07	0.02	0.05	10.10
3분위	0.58	1.52	3.47	2.51	1.11	0.56	0.20	0.17	0.07	0.03	10.23
4분위	0.46	0.87	1.74	2.64	1.96	1.13	0.57	0.28	0.24	0.17	10.07
5분위	0.57	0.55	0.62	1.68	2.55	2.10	0.79	0.53	0.34	0.37	10.10
6분위	0.19	0.24	0.27	0.91	1.80	2.73	2.27	1.04	0.50	0.14	10.09
7분위	0.09	0.24	0.30	0.39	0.93	1.56	3.08	2.34	0.80	0.23	9.97
8분위	0.10	0.28	0.21	0.38	0.38	0.77	1.70	3.23	2.01	0.59	9.64
9분위	0.11	0.12	0.14	0.29	0.39	0.55	0.88	1.71	3.78	2.09	10.06
10분위	0.00	0.06	0.10	0.06	0.10	0.22	0.24	0.58	2.12	6.26	9.75
소계	9.99	10.00	10.00	10.01	10.00	9.99	9.99	10.03	10.00	9.99	100.00

2) 2020-2021년

		2021년 (%)									
2020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계
1분위	6.45	1.94	0.63	0.31	0.24	0.14	0.17	0.03	0.12	0.01	10.05
2분위	2.08	4.81	1.72	0.61	0.25	0.18	0.12	0.10	0.02	0.15	10.03
3분위	0.68	1.71	4.34	1.81	0.84	0.38	0.10	0.04	0.09	0.09	10.08
4분위	0.33	0.65	1.91	3.97	1.59	0.86	0.40	0.28	0.08	0.02	10.10
5분위	0.21	0.58	0.56	1.83	3.54	2.00	0.71	0.43	0.22	0.07	10.15
6분위	0.09	0.15	0.36	0.79	1.90	3.56	1.97	0.86	0.23	0.22	10.12
7분위	0.06	0.03	0.13	0.29	0.80	1.77	3.83	1.89	0.80	0.28	9.89
8분위	0.02	0.05	0.14	0.30	0.55	0.78	1.70	3.92	1.90	0.53	9.90
9분위	0.05	0.08	0.13	0.03	0.25	0.19	0.70	1.89	4.82	1.73	9.86
10분위	0.03	0.01	0.07	0.07	0.03	0.14	0.29	0.55	1.72	6.91	9.83
소계	10.00	10.01	10.00	10.01	9.99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0

주: 1) 각 통계치는 해당 기간 전체 가구 중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의 비율임. 표 대각선에 위치한 수치는 해당 기간 동일 분위에 잔류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은 2.01%, 3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0.78%, ... , 최상위 소득층인 10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0.06%로 나타난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0%로 2007년 1분위 가구의 비율과 일치한다. 둘째 행(2분위)~열 번째 행(10분위)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분위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소득분위에 대하여 이동 전 소속 분위와 이동 후 소속 분위를 대응(매칭)시켜서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면 행렬(matrix) 형태로 표시되는데, 10개의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비율은 분위 수(10개)의 제곱에 해당하는 100개의 수치로 표시된다.

분위이동가구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행렬로 소득이동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계산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숫자가 나열되는 것이 단점이다. 소득이동성이 커졌는지 또는 작아졌는지를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V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분위가 소득이동성이 더 큰지 혹은 작은지 여부를 한 눈에 판단하기 어렵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른 분위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소득분위에 잔류하는 가구의 비율, 즉 <표 VI-6>에 제시된 소득잔류율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소득잔류율은 소득이동성의 반대개념이다. 예를 들어 <표 VI-6>의 첫째 열은 2007~2008년 동안 전체 가구 중 계속 동일 분위에 잔류한 가구의 비율을 분위별로 보여준다. 2007~2008년 동안 분위 이동을 하지 않은 10개 분위의 잔류가구 비율을 합산하면 38.00%이다.

같은 방식으로 각 기간의 전체 잔류가구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0~2011년에는 40.86%, 2014~2015년에는 46.70%, 2017~2018년에는 44.06%, 2020~2021년에는 46.15%로 추정된다.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2000년대 말 이후 동일 분위 잔류가구의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잔류가구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반대로 분위 이동한 가구비율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동성이 작아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모두 측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분위이동을 하였더라도 얼마나 멀리 떨어진 분위로 얼마만큼의 가구가 이동하였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렬의 형태로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표 VI-6> 소득이동상 동일분위 잔류가구 비율, 2007~2021

	(%)				
	2007-2008	2010-2011	2014-2015	2017-2018	2020-2021
1분위	6.14	6.86	6.40	6.63	6.45
2분위	4.12	4.38	4.81	5.14	4.81
3분위	3.47	3.33	4.05	4.13	4.34
4분위	2.64	3.00	3.73	3.56	3.97
5분위	2.55	3.04	3.51	3.15	3.54
6분위	2.73	2.71	3.80	2.58	3.56
7분위	3.08	3.32	3.79	3.20	3.83
8분위	3.23	3.65	3.93	4.00	3.92
9분위	3.78	4.25	5.55	4.64	4.82
10분위	6.26	6.32	7.13	7.03	6.91
전체	38.00	40.86	46.70	44.06	46.15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개념이나 통계분석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소득이동성의 크기 비교 등을 해석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표는 없는가? 다행히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있다(yes)’이다. 성명재(2018)와 김학수(2020)는 복잡한 표 대신 분산(variance)이라는 수치 하나로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정보는 평균과 분산이 대표적이다. 평균은 통계 분포의 위치 정보에 대한 크기를 보여주는 통계치(statistic)이다. 분산은 변수의 변동성, 즉 변수의 변화폭이 평균점에서 얼마나 멀리 또는 가깝게 펼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치이다. 소득의 분산이 크다는 것은 가구 간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분산이 작다는 것은 가구 간 소득격차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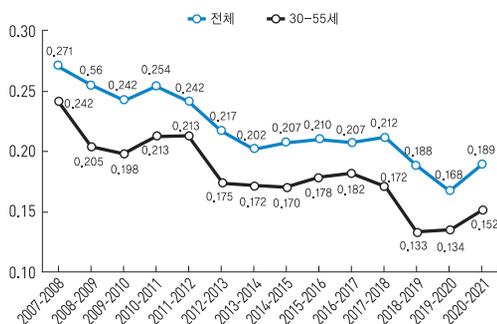
가구소득의 순위변동 크기에도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순위의 변동 정도가 평균 수준에서 얼마나 먼 곳 또는 얼마나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분산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소득이동성이 크다는 것은 가구 소득의 순위변동이 크다는 것, 즉 분산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동성이 작다는 것은 순위변동 크기가 작고, 따라서 분산값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구소득 순위의 변동 크기를 분산으로 측정하면 소득이동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VI-27]은 각각의 기간에 소득이동성을 분산으로 측정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실선은 전체 가구 대상의 분산값, 검은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가구주 연령이 30~55세인 가구로 한정된 경우의 분산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2007~2008년 사이의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분산은 0.271로 추정되었다.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분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19~2020년에는 0.168로 감소하였다. 2020~2021년에는 0.189로 분산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 기간을 놓고 볼 때 분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추세적으로 소득이동성이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분석대상가구를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인 30~55세로 한정된 경우에도 분산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에서도 소득이동성이 하락하였음을 시사한다. 소득이동성이

[그림 VI-27] 분산으로 측정된 소득이동성,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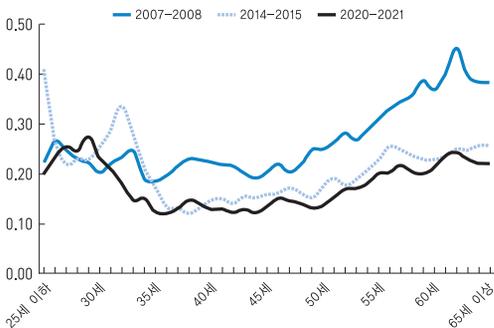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가구 소득순위 변동의 크기를 분산의 형태로 측정된 지표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하락하였다는 것은 소득순위의 변동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28]은 연령을 25세 이하, 26~64세의 1세별 집단, 65세 이상 등 총 41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각 연령집단 내에서의 소득이동성을 분산값의 형태로 산출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분석대상기간에 따라 분산곡선의 절대높이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대칭적인 U-자 형태의 곡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젊은 연령대와 노인연령대에서 분산값이 크고,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에서는 분산값이 작다는 것이다.

[그림 VI-28] 연령별 소득이동성(분산) 분포, 2007-2021



주: 1) 해당 기간 가구 소득순위 변동의 크기를 분산의 형태로 측정된 지표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에서 소득이동성이 크고, 반대로 은퇴기나 취업시작 연령대에서 소득이동성이 작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증분석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취업초기

의 젊은 연령대에서는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연령집단에 다수를 구성한다. 이들은 대부분 미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순위 변동이 크지 않다. 그러나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순위가 수직상승한다. 이런 연유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이 크다. 반대로 노인 연령대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 소득순위가 수직낙하한다. 따라서 노인 연령대에서도 소득이동성이 높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노인연령층의 경우 연령집단 내에서는 소득이동성이 크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하면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가중평균한 경제 전체의 소득이동성은 상승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림 VI-27]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은 정반대이다. 왜 그런가?

경제 전체의 소득이동성은 각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의 가중평균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 밖에도 각 연령대 사이의 소득순위 변동성을 나타내는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의 크기도 전체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연령대는 재취업을 통해 고소득 직종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고소득 직종이 아니더라도 젊은 연령대, 즉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체력이나 노쇠로 인한 건강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등도 세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 연령대는 젊은 연령

대와 경쟁하여 소득순위 변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 연령대와 핵심경제활동 연령대 사이에는 이동이 쉽지 않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은 상당히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의 가중치도 커진다. 그 결과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령집단 간 이동성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이동성이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요인(연령집단 내 이동성)과 소득이동성을 낮추는 요인(연령집단 간 이동성)을 동시에 가진다. 인구고령화가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 중에서 어떤 효과가 더 큰지에 달려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연령집단 내 소득이동성이 높아지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소득이동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빈곤율 추이

소득분배구조를 얘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빈곤율의 변화추이이다(성명재, 2007). [그림 VI-29]는 2007~2021년 동안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빈곤율은 크게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절대빈곤율이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전체 가구 중 절대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대빈곤율이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40% 또는 50%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전체 가구 중 이들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글에서는 가구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상대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위가 정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의 가구 수가 99개라고 할 때 소득순위가 정 가운데, 즉 50위인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최저생계비란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가구소득 값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가구소득 금액을 나타낸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설정된다. 흔히 중위소득의 40% 내외에서 최저생계비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9.5%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을 가상의 최저생계비로 간주하여 절대빈곤율을 추정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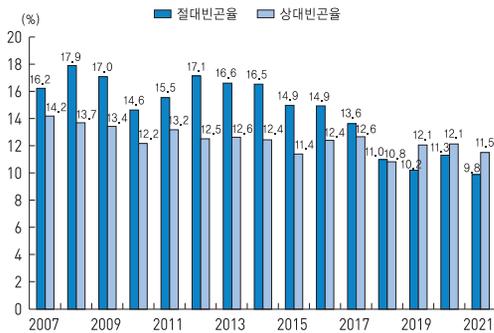
[그림 VI-29]에서 보듯이 절대빈곤율은 2007년

4)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가구원수별로 기준중위소득 값을 발표하고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까지 최저생계비 정보와 기준중위소득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제공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 값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9.5%로 책정되어 있었다.



16.2%에서 2008년 17.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21년에는 9.8%로 감소하였다. 상대빈곤율은 2007년 14.2%에서 2021년 11.5%로 감소하였다. 절대수준이 조금 다르지만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VI-24]에서 보듯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미세하게 상승하였지만, 총소득 지니계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가한 것이 빈곤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재분배 효과가 커지면서 빈곤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VI-29] 빈곤율, 2007-2021



주: 1) 절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절대빈곤선보다 작은 가구의 비율임. 절대빈곤선은 20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 2015년부터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39.5% 수준임.
 2) 상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50%보다 작은 가구의 비율임.
 3)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맺음말

200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소득분배구조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단계에서는 소득불균등도가

미세하지만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총소득 단계의 소득불균등도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소득분배구조의 변화패턴이 작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데에는, 민간과 정부의 현금소득의 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계층 간 가구소득의 순위변동을 통한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동성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인구고령화가 그런 추세에 일조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이동성이 높으면, 단기적으로 소득불균등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순위가 뒤섞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구 간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소득불균등도가 크더라도 소득이동성이 높으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소득분배격차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소득불균등도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소득이동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단기 소득분배격차가 장기에도 잘 완화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여 년간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배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고소

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배수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지에 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소득불균등도(지니계수) 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반면,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구조는 어느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단순히 소득불균등도(지니계수)만으로 분배구조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분배구조의 건강한 정도를 진단·분석·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계층 간 소득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느냐의 문제보다는 빈곤율, 빈곤대책 문제 등이 훨씬 더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학수. 2020.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20-09. 한국개발연구원.
- 성명재. 2007. “빈곤탈출추이와 빈곤정책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제22집, 제1호, pp. 61-88.
- _____. 2015.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22권, 제2호, pp. 215-236.
- _____. 2016.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의 추정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제22권, 제1호, pp. 1-79.
- _____. 2018.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제24권, 제3호, pp. 1-58.
- 정지운·임병인. 2020.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68집, 제4호, pp. 93-118.
- 최제민·김성현·박상연. 20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66집, 제1호, pp. 155-182.